

# 美 입국제한국 북한·베네수엘라·차드 추가

〈아프리카 중북부〉

## 입국 북한인 수 극히 미미

### 실효성보다 상징적 의미

미국이 자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反)이민 행정명령' 대상 국가 명단에 북한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AP·AFP통신 등 외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 차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8개국 국민의 미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 포고문(Proclamation)에 서명했다.

내달 18일부터 발효되는 수정 행정명령은 기존 입국 제한 또는 금지 대상국이었던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무슬림 6개국 가운데 수단이 빠지고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등 3개국이 추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북한은 미국 정부와 어떤 면에서도 협조를 하지 않고 정보 공유의 필요조건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며 북한을 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한 이유를 밝혔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존 무슬림 6개국을 대상으로 90일간 미 입국을 일시 제한했던 반이민 행정명령의 기한이 24일 만료됨에 따라 나온 것이다.

새 행정명령은 내달 18일부터 발효되며 입국 제한 범위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WSJ는 "북한과 시리아는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물론 방문을 원하는 사람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차드, 리

비아, 예멘은 이민 비자는 물론 사업이나 관광 비자를 갖고 있어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그러나 북한과 함께 새로 명단에 포함된 베네수엘라라는 정부 고위 관료와 직계 가족만 해당된다.

새 행정명령은 기존 행정명령과 달리 발효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상황 변화에 따라 제한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행정명령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비자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자 신청 예정자에게만 적용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 미국에 입국하는 북한인들의 숫자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실효성보다는 상징적인 의미

로 북한을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고 미국과 북한이 연일 '말뚝탄'을 주고 받으며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을 제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공개된 직후 트위터에 "나는 미국의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우리가 안전하게 심사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미 정부의 이같은 입국 금지 결정에 대한 입장 질문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 무축천의 측근 허경종

허경종(許敬宗, 592-672)은 향주 신성 출신으로 자는 연축이다. 무축천의 측근으로 권세를 누렸다.

수양제 때 수제로 천거되 관직에 들어왔다. 수말 혼란기 반군지도자 이밀 밑에서 기실(記室)이 되었다. 진왕 이세민이 설치한 18학사의 일인으로 추천되었고 황제로 즉위한 후 증서사인이 되었다. 급사중으로 태종이 주도한 현무문의 정변을 미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前 황제의 행위에 대한 사관의 기록은 황제가 보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태종은 이를 문제 삼았다. 태종은 "제왕이 스스로 국사를 보려고 하는 것은 전일의 악을 알고 장래의 혼계로 삼기 위함이다"며 기록을 보고 현무문 정변 관련 대목을 다시 쓰도록

어이라고 할 것인가"라며 고통스런 속마음을 내비쳤다. 그는 "장손무기는 지금의 간사한 것들의 영웅이고 왕망과 사마의 같은 무리이니, 폐하께서 조금이라도 미루신다면, 신은 아마도 변란이 거드랑이에서 발생할까 걱정이니,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고 처벌을 주장했다. 측근 원공유를 보내 저수량이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거짓 계책을 꾸민다. 저수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장손무기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현재 사천성 팽수현에 해당하는 귀양지 검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무축천의 최대 정적이 제거되었다.

그는 재상 상관의 처형에도 개입했다. 무축천의 전횡이 질린 고종은 그녀를 폐황후시키려 했다. 상관은 조

## 무축천 책봉 앞장... 권력에 눈 먼 간신

명하였다. 그는 황제의 뜻을 받들어 사실(實實)을 운색했다. 권력에 아부하는 성품이 잘 들어나는 일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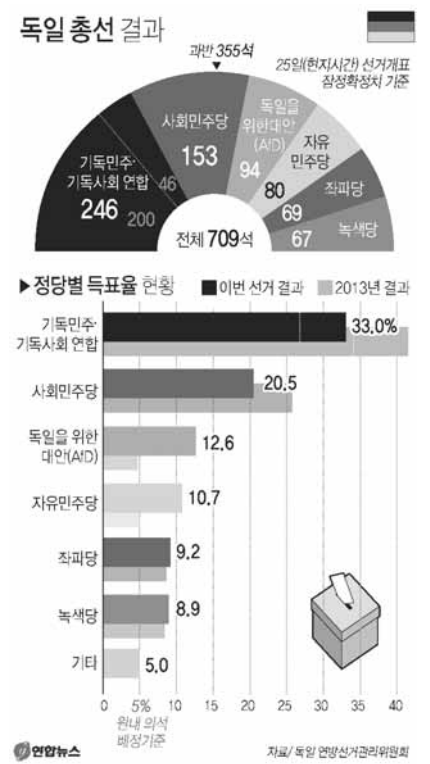
고종이 왕황후를 폐하고 무축천을 새 황후로 세우는 것에 적극 관여했다. 공으로 증서령이 되었다. 그는 무축천의 뜻을 헤아려 고명대신인 장손무기를 제거하는 작업에도 깊이 관여했다. 장손무기는 태종비 장순황후의

정 사람들 모두 그녀가 사라지기를 원한다고 동조했다. 그러나 무축천 제거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는 바람에 상관은 처형되고 그의 일가족은 조정의 노비가 되었다.

672년 정2품 고양군공 허경종이 죽었다. 그의 공과에 관하여 조정에서 논의가 분분했다. 태상박사 원사고는 "그는 큰아들을 먼 곳으로 귀양 보냈고 작은 딸은 오랑캐에게 시집보냈습니다. 시벌에 따르면 이름과 실체가 다르면 무(謬)라고 합니다"며 시호(謚號)를 무공으로 정하도록 청하였다. 정처인 배씨가 일찍 죽자 그녀의 몸종을 후처로 삼고 성을 우라고 하였다. 그러나 큰아들인 허암이 그녀와 간통하자 불효를 이유로 외지에 귀양을 정한 바가 있다. 그의 손자 허인백이 반대 상소를 올리자 태상박사 왕복지는 무공이라는 시호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예부상서 왕사경의 의견을 따라 시호를 공(恭)으로 정하였다.

이처럼 시호가 논란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의 처세는 문제가 많았다. 태종의 뜻에 부합해 현무문의 난을 보기 좋게 운색한 점, 무축천을 도와 왕황후를 폐하는데 앞장 선 점, 고명대신 장손무기를 제거하는데 참여한 점 등은 선비로서 결코 명예스런 행동이 아니었다. 태종, 고종 시절 두루 요직을 거쳤지만 덕(德)이 재(才)에 미치지 못한 인물이었다.

# 메르켈 '가시밭길' 4연임 출발



## 獨 총선 메르켈연합 33% 1위 극우정당 AfD 제3당으로

지난 24일(현지시간) 열린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집권 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CDU·CSU) 연합이 1위를 확정했다고 독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당 득표율 잠정확정치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기민·기사 연합의 합산 수치가 33.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별로는 CDU 26.8%, CSU 6.2%였다.

16년 최장수 총리 탄생... 메르켈과 도전자들 24일(현지시간) 열린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집권 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 연합이 1위를 확정하면서 앙겔라 메르켈(윗줄) 총리의 4연임이 확실시됐다. 그동안 메르켈에 패배한 총리 후보 마틴 슈츠(왼쪽부터) 사회민주당 대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피어 슈타인브뤽 전 재무장관,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

이로서 메르켈 총리는 차기 연립정권 구성을 위한 정당 간 조합 협상을 타결하면 이번엔 선출된 19대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다시 총리에 오른다.

연방 헌법 격인 기본법에 따르면 원 구성을 위한 최초 본회의는 투표일 차를 다음 날부터 늦어도 30일째 되는 날까지는 열려야 하며, 그다음 본회의 때 총리 선출 표결을 한다. 역대 의회는 대체로 첫 본회의를 열고 나서 늦어도 이틀 안에 총리를 뽑고 수락 선서를 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메르켈이 처음 총리가 된 2005년에는 기민·기사 연합과 사회민주당(SPD) 간 연정 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총선 후 65일 지난 시점에서야 총리 선출 표결이 시행됐다.

이번 선거에서 메르켈 주도의 대연정에서 벗어나 집권을 주도하고자 했던 사민당은 20.5%를 얻는 데 그쳤다. 이는 역대 최악의 성적이다. 사민당은 기민·기사 연합과 지난 4년 동안 메르켈 대연정의 조연으로 활동했다.

2013년 창당한 극우성향의 포퓰리스트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12.6%의 지지를 받아 일약 제3당으로 뛰어올랐다. 이 정당의 연방의회 진입은 처음이다. AfD는 앞서 독일 전체 16개 주 의회 중 13 곳에 의석을 꿰찬 바 있다. 그러나 AfD는 연정 구성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기민·기사 연합이나 사민당 등 기성 정당들로부터 연정 참여 원천 배제 등 철저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최 선 규 H. 010-3605-5000